

은행법 시행령

<목 차>

과태료 부과기준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 자	이름	송현지
	담당부서 (과)	은행과		직급	5급
	국장	김학수		연락처	02-2100-2954
	과장	김진홍		이메일	sobrious@korea.kr

금융서비스국장 김학수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과태료 부과기준																		
	2.규제 조문	은행법 시행령 제31조, 별표4																		
	3.위임법령	은행법 제69조 제5항																		
	4.유형	강화	5.입법예고	'17.5.22.~7.3.																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<input type="checkbox"/> 은행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배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 으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금액에 이를 반영 <input type="checkbox"/> 과태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이므로 부과금액 등을 법령 으로 규정할 필요																		
	7.규제내용	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고,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업권별 기준금액에 차등을 최소화																		
	8. 피 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<table><tr><th colspan="2">유형</th>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<th>의견 수렴방식</th><th>의견 내용</th></tr><tr><td>피규제자</td><td>은행, 은행의 임직원, 대주주 등</td><td>금융감독원 수검대상 은행 및 임직원 등</td><td>입법예고</td><td>-</td></tr><tr><td>이해관계자</td><td>금융소비자 및 관련 단체, 금융감독원 등</td><td>-</td><td>입법예고, TF 운영(금융감독원)</td><td>-</td></tr></table>			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 내용	피규제자	은행, 은행의 임직원, 대주주 등	금융감독원 수검대상 은행 및 임직원 등	입법예고	-	이해관계자	금융소비자 및 관련 단체, 금융감독원 등	-	입법예고, TF 운영(금융감독원)	-
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 내용															
	피규제자	은행, 은행의 임직원, 대주주 등	금융감독원 수검대상 은행 및 임직원 등	입법예고	-															
이해관계자	금융소비자 및 관련 단체, 금융감독원 등	-	입법예고, TF 운영(금융감독원)	-																
9.기대효과	금전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																			
규제의 적정성	10.영 향 평 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															
		해당 없음	해당 없음	해당 없음																
	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행정질서벌 또는 행정제재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대안별 비용·편익 분석을 생략																		
기타	12.일 물 설 정 여부	해당 없음																		

<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
제26조의3(과징금의 부과 통지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 ③ (생략) [별표4] <u>과태료의 부과기준</u> (제31조 관련) 1.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 2. 개별기준	제26조의3(과징금의 부과 통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,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,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.</u>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[별표 4] ----- 1. -----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면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 2. -----																		
(단위: 만원)					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위반행위</th><th>근거 법조문</th><th>금액</th></tr><tr><td>가. 은행의 임원등(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은행의 임원등을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 또는 직원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</td><td>법 제69조 제4항제1호</td><td>300</td></tr><tr><td>나. 법 제13조제2항 또는</td><td>법 제69조</td><td>1,000</td></tr></table>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	가. 은행의 임원등(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은행의 임원등을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 또는 직원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4항제1호	300	나. 법 제13조제2항 또는	법 제69조	1,000	<table><tr><th>-----</th><th>---</th><th>---</th></tr><tr><td><삭제></td><td>-----</td><td></td></tr><tr><td>나. -----</td><td>-----</td><td>6,000</td></tr></table>	-----	---	---	<삭제>	-----		나. -----	-----	6,000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																	
가. 은행의 임원등(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은행의 임원등을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 또는 직원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4항제1호	300																	
나. 법 제13조제2항 또는	법 제69조	1,000																	
-----	---	---																	
<삭제>	-----																		
나. -----	-----	6,000																	

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	제1항제1호	
다. 법인인 자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2호	3,000
라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2호	1,500
마. 법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3호	1,500
바. 법인인 자가 법 제15조의3제3항(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·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4호	3,000
사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5조의3제3항(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·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4호	1,500
아. 삭제 <2016. 7. 28.>		
자. 은행이 법 제30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5호	5,000
차. 은행이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5호의2	2,500
카.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4항제2호의2	250
타. 은행이 법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5호의3	2,500
파.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제34조의3을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4항제2호의3	100
하. 은행이 법 제34조의3	법 제69조	1,000

-----	-----	
다. -----	-----	6,000
라. -----	-----	3,000
마. -----	-----	3,000
바. -----	-----	6,000
사. -----	-----	3,000
자. -----	-----	10,000
차. -----	-----	3,000
<삭제>	---	
타. -----	-----	6,000
<삭제>	---	
하. -----	-----	3,000

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	제2항	
거. 은행이 법 제35조의2 제4항 또는 제35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6호	5,000
너. 은행이 법 제35조의2 제5항·제6항 또는 제35조의3제5항·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7호	3,000
더.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69조 제4항제3호	250
러.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	법 제69조 제4항제4호	100
머.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	법 제69조 제4항제4호	250
버.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9조 제4항제5호	500
<신 설>		
서. 법인인 자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8호	5,000
어.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8호	2,500

----- ----- --	----- - -----	
거. ----- ----- ----- ----- --	----- ----- ----- ----- --	10,000
너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6,000
더. ---이 ----- ----- ----- --	----- 제1항제7호의2 -----	6,000
러. ---이 법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	제1항제7호의3	6,000
머. ---이 법 제43조의3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경우	제1항제7호의4	6,000
버. ---이 ----- ----- ----- -----	제1항제7호의5	10,000
버의2.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9조 제4항제5호	2,000
서. ----- ----- ----- -	----- ----- ----- -----	10,000
어. -----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 -----	5,000

저. 은행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9호	2,500
처.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4항제6호	250
커. 은행이 법 제52조의3 제4항 중 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10호	5,000
터. 은행이 법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	법 제69조 제3항	500
퍼. 은행이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·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11호	1,000
허.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, 제출, 보고,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	법 제69조 제4항제7호	100
고.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·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	법 제69조 제4항제8호	100

저. ----- -----	----- -----	3,000
<삭 제>		
커.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	10,000
터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1,800
퍼.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	2,000
허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200
고. ----- ----- ----- -----	----- ----- ----- -----	200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☐ (추진배경)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, 부과대상 신설 등 은행법 개정
(‘17.10.19일 시행)* 내용에 맞추어 시행령 규정 사항을 정비

* 「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」(‘15.9월)에 따라 과태료·과징금 부과한도 인상,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 부과 등의 내용으로 11개 금융법 일괄 개정

- ☐ (정부개입 필요성) 과태료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인 바
부과금액 등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

*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는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·제재에
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☐ (대안의 내용) 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됨에 따라
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*

-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업권별 기준금액의 차등을 최소화**하여
제재의 형평 제고

* 원칙 : 법인 1억원, 임직원 2천만원, 임직원 외 대주주 등 개인 5천만원

** 위반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의 100%, 60%, 30%, 20% 등 금액으로
규정하는 현행 시행령상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적용

(예시) 대주주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의무 위반시 법률상 최고한도의액의 100%, 업무보고서 제출의무
위반시 법률상 최고한도의액의 60% 등

< 은행법 시행령 과태료 기준금액 개정안 >

(단위: 천만원)

위반의 중요도	부과 사유	법상 한도 ¹⁾	부과 대상 ²⁾	현행	개정
100%	검사 거부·방해·기피	10	은행	-	10
		2	임직원	0.5	2
	광고의 방법·절차 위반	10	은행	5	10
	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 거부·방해·기피	10	법인	5	10
		10	개인	2.5	5
	대주주 신용공여 등 이사회 의결 의무 미이행	10	은행	5	10
60%	지급준비금 보유의무 위반 등	10	은행	5	10
	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위반	3	은행	0.5	1.8
	금융사고 보고·공시 의무 위반	5	은행	1	3
	금융사고 예방대책의 내부통제기준 미반영	10	은행	2.5	6
	대주주 신용공여 등의 보고·공시 위반	10	은행	3	6
	동일인 주식보유승인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 등	10	법인	3	6
		10	개인	1.5	3
	부수·겸영업무 등 신고누락	10	은행	1	6
	업무보고서 등의 허위작성, 제출기준위반 등	10	은행	0.1, 0.25	6
	경영공시자료 허위작성, 제출기준위반 등	10	은행	-	6
	재무제표의 허위 공고 등	10	은행	0.25	6
	은행 유사상호 사용	10	법인	3	6
		10	개인	1.5	3
30%	동일인 주식보유비율 보고 등 위반	10	법인, 개인	1.5	3
	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	10	은행	2.5	3
	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위반	10	은행	2.5	3
10·20 %	은행법·법령·지시 위반	10	은행	1	2
		2	임직원	0.1	0.2
	서류의 비치·제출·보고·공고·공시 미흡	2	임직원	0.1	0.2

주 : 1) '17.10월 시행 예정인 은행법 기준 / 2) 개인은 '법인이 아닌 자'를 의미

☐ (선택 근거)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금융회사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「제재개혁」(15.9월)*의 일환

* 금융지주회사법 개정(17.10.19일 시행)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인상

○ 규제대안은 과태료 금액을 인상하고 업권간 형평을 맞추는 것으로 제재의 실효성·형평성 측면에서 현행유지안보다 우위

○ 행정력 투입 수준 대비 위반행위 억제력 등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의 효과 측면에서도 규제대안이 현행유지안보다 우위

☐ 한편,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으로 인해 금융회사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나

○ 업권 규모 및 타 기관 사례에 비해 경미했던 금전제재를 현실화 하는 수준이고

○ 과태료 인상 수준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 법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움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금융감독원	금융감독원 실무진과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	특이사항 없음
금융회사 등	시행령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	진행 중

3. 기대 효과

☐ “숨방망이 금전제재”가 사라지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

○ 대형 금융사고·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금전제재 금액이 턱없이 낮아 “숨방망이 제재”라는 비난이 많았음

⇒ 은행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함으로써 금전제재 제도의 실효성 제고 기대

☐ 업권마다 상이한 종류·금액의 금전제재를 통일적으로 개정하여 금융업법간 형평성 제고

○ 동일·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업권간 제재 유형이나 수준이 다른 문제

⇒ 동일·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재가 부과되도록 업권별 제재 형평성을 제고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☐ (규제목적) 금융회사 및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를 억제하여, 금융회사의 신뢰성, 금융시장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편익을 제공

☐ (규제수단)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, 공정거래법 등 타업권 및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움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☐ 해당사항 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□ 영국·미국 : 영국은 Financial Penalty, 미국은 Civil Money Penalty의 단일 구조로 우리나라의 과태료·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전제재를 부과

○ 우리나라는 과태료·과징금이 적용되는 영역·부과요건·부과 금액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,

○ 영국과 미국은 금전제재 부과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“법령 또는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”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소액부터 고액까지 부과 가능

- 영국은 부과금액의 상한이 없으며*

*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에서 “it may impose on him a penalty of such amount as it considers appropriate”으로 규정

- 미국은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3단계*로 구분하여 위반행위 기간 1일당 상한액을 규정

* 위반행위 1일당 (1단계) \$7,500 / (2단계) \$37,500 / (3단계) \$1,425,000

- 미국이나 영국은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 하에 거액의 금전제재를 부과해 음

· ‘16년 세계 최대은행인 웰스파고에 대해 고객명의 무단도용 등 사유로 CFPB(미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)가 \$1억(1천억원), OCC가 \$3.5천만(3.5백억원), LA City가 \$5천만(5백억원)의 민사제재금을 부과

· ‘13년 미국 금융당국은 JP모건에 대해 신용파생상품 투자관련 리스크관리 부적정 등 사유로 SEC가 \$2억(2천억원), FRB가 \$2억(2천억원), OCC가 \$3억(3천억원)의 민사제재금을, 영국 금융당국은 £1.4억(2천억원) 등의 민사제재금을 부과

· ‘11년 SEC는 내부자 거래 관련 캘리언 펀드 설립자 라자라트남에 대해 부당이득인 \$5천만(5백억원)의 약 2배에 가까운 \$9천만(9백억원)의 민사제재금을 부과

□ 독일·일본 :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관련 법률에서 금전제재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

○ 독일은 과태료·과징금을 구분하지 않고, Bußgeld라는 단일 금전제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로 상한액을 설정(최대 100만유로)

○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과태료·과징금*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,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위반법인을 대상으로 한 고액의 벌금형(최대 30억원)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

*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공인회계사법에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음

○ 타법사례

□ 공정거래법 시행령 비교

○ 은행법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금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비교 하더라도 매우 낮은 편

- 공정거래법은 허위 공시,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*

* 조사 거부·방해·기피행위는 법률상 부과한도인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

- 반면, 은행법은 시행령에서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음

□ 금융법 사례 분석

- ① 현행 금융법 시행령상 **과태료 기준금액은 최대 5천만원**으로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·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

* 과태료 부과금액('15년): 기관 33.6억원(건당 12백만원), 개인 29.2억원(건당 5백만원)

⇒ 법인인 자 **최대 1억원**, 법인이 아닌 자(임직원 등) **최대 5천만원** 수준으로 과태료 기준금액이 인상되도록 은행법 등 **11개 주요 금융법*** 시행령을 일괄적으로 개정 추진중

* 은행·금융지주·보험·자본시장·지배구조·여전·저축은행·신협·신용정보·전자금융·대부업법

- ② 동일·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상이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여 **업권간 제재 형평**을 제고

- 경영공시의무 관련 은행법 시행령은 타 금융법과 달리 제재근거 규정이 없어 경영 투명성 등 중요성에 비추어 **동일 수준으로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**

구 분	현 행	개정안
금융지주법 시행령	과태료 5백만원	과태료 6천만원
은행법 시행령	-	
자본시장법 시행령	과태료 1천만원	
보험업법 시행령	과태료 3.5천만원	
여전법 시행령	1.5천만원(미공시) 5천만원(허위공시)	과태료 3천만원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□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**금융회사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**를 위해 추진한 「**제재개혁**」('15.9월)의 일환

- 강화된 규제로 인해 발생할 과태료 금액도 타기관, 해외 사례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**규제의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워**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

○ 규제 차등화 방안

□ 과태료는 **동일 권역**의 기관 등이 행한 **동일한 위반행위**에 대해 원칙적으로 **동일한 수준의 제재**가 적용됨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□ 금번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에 불과함

- 또한, 기존의 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인상된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**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**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□ 기존의 과태료 산정체계 하에서 인상된 기준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**추가적인 예산 소요 없음**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☐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은 금융감독원,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한 「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」(‘15.9월)의 후속조치임
- 방안 발표 후에도 피규제대상자인 금융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2차례(‘15.12월, ‘16.10월)에 걸친 제재개혁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(심층인터뷰 등)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의견을 청취·수렴하였음

2. 향후 평가계획

- ☐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

3. 종합결론

- ☐ 금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금융회사의 자율성·책임성을 강화하는 「제재개혁」 정책의 일환으로
-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신뢰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목표 달성 기대